



코스피 2078.69 (-10.93)	코스닥 682.37 (-9.18)
금리 (연이자율) 1.96 (-0.02)	환율 (100원당) 1123.30 (-0.50) (7일)



[혁신도시]
나주-한국전력
동반성장의 등불
02

“미래세대 위한 보편복지” vs “대권 노린 선심행정”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결제한 서류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이었다. 현재 약 70만명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건강한 미래세대를 키우는 일이지 값을 매길 수 없는 투자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까지 국·공·사립 학교유형이나 초·중·고교 등 학교급과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계획대로면 2011년 공립초부터 시작된 서울 학교 무상급식이 10년 만에 완성되게 된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월 29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교·사립초 친환경 무상급식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021년부터 서울 시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까지 지원하는 건 ‘혈세 낭비’라며 반대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 자 국가의 의무라며 모든 학생이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무상급식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보편 복지는 낭비가 아니다
서울시가 지난 8월 발간한 ‘친환경 무상급식 성과 백서’에 따르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지난 4년간 4조원이 넘는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2011~2014년 무상급식에

헌법 보장 ‘국가의 의무’
모든 학생 평등지원 돼야
전면 지원은 ‘혈세 낭비’
복지사각지대에 지원을

2조25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4조1913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었다. 이는 10억원의 예산을 급식에 투자하면 직·간접적으로 18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컸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연평균 25만5000명, 지난 4년간 102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친환경 유통센터 설립과 식료품제조업 생산 증가로 인한 고용

확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양재열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무상급식은 세금으로 하는 공동구매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편 복지로 접근할 경우 규모 경제의 효율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급식 품질 향상 옵션으로 ‘급식 펀드’ 제도를 도입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직위에 따른 도덕적 의무) 차원에서 접근하면 보편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무상급식 신청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차별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편적 복지 차

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돈 없는 사람은 주고, 있는 사람은 주지 말자 이런 차별의 논리를 떠나 국가나 교육 기관이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무상급식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위 10%를 선별하는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국민의당 정책위원장으로 이동수당 정책 조율에 참여한 이영호 무소속 의원은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중 상위 10% 가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금수저를 배제하기 위해 아동수당은 선별적 복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관철시킨 바 있다”며 “그러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는 부작용을 발견했다”고 고백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1600억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는 매년 8만 가구가 아동수당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 의원은 “이는 아동수당 대상 가구 중 소득 상위 10%인 가구가 9만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행정비 효율”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



타지마할 방문한 김정숙 여사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했을 때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은 탁상행정
서울 강남에 사는 시민 박모(54)씨는 “부잣집 애들한테 공짜

밥을 왜 주는 거냐.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건 이해한다. 무상급식 전면 도입은 세금만 축내는 일이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최저임금 인상+카드수수료 인하 땐 ‘고용참사’ ‘BMW 화재’ 원인 여전히 논란

파이터치 연구원 보고서 “내년 인상을 재검토하고 수수료 현행유지가 맞아”

내년 최저임금을 10.9% 올리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7.46% 내리면 약 96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0.9%)을 재검토하고, 소상공인 등이 주장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현행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펴낸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을 예정대로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올리면 일자리 자동화가 조래돼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약 47만명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측이 제시한 근거는 이렇다.

최저임금을 10.9% 올리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단순노무 일



자리 47만1000개와 비단순노무 일자리 4만2000개가 줄어든다. 이로 인해 일반재 생산량은 1.18% 감소하고, 일반재 가격은 1.76% 오른다. 결국 총매출은 28조7000억원 어치 늘어난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의 논리는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생산이 증가해 결국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연구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인 단순노무 일자리를 줄이는 동시에 공정을 자동화

하고, 이 여파로 비단순노무 일자리까지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도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증가와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부담 때문에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관련 일자리를 줄이는 등 노동시장에 먼저 충격을 준다는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이 10.9% 상승하면 실질생산량은 줄어들어도 가격이 상승해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최저임금이 오르는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7.46% 내렸을 때를 복합적으로 가정해 그에 따른 영향도 함께 분석했다.

현재 신용카드 이자비용은 소비자들 2.8%, 가맹점들이 97.2%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의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경우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는 8775원에서 31만6620원으로 급등한다. 대신 신용카드 수수료는 7.46% 낮아진다.

라 원장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카드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보다 소비자들 신용카드를 덜 사용하게 됨으로써 매출이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 이로 인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당초보다 11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을 내년 10.9% 올리고 신용카드 수수료가 7.46%로 낮아질 경우 이로 인해 기업들의 전체 매출액은 무려 66조4000억원이나 감소하고, 총 96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줄어드는 일자리는 비단순 노무자가 44만명, 단순 노무자가 52만명이다.

라 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을 10.9% 올리기로 결정한 것은 심도있게 재검토해야 하며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비용이 전가될) 소비자들은 카드 사용을 꺼려 오�히려 소상공인 매출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민관조사단 중간 조사 결과 BMW 측 예전 결과와 같아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BMW 차량화재 원인을 조사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또다른 화재원인으로 ‘EGR 밸브’ 문제를 지목했지만 이는 BMW가 애초에 문제 지적했던 부분과 동일한 문제라는 반론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일 민간합동조사단의 BMW 화재 관련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 실험 결과 BMW 차량 화재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에 누수가 발생한 상태 ▲EGR 밸브가 일부 열림으로 고착된 상태에서 고속주행 ▲배출가스 후처리시스템(DPF/LNT) 작동 등의 조건에서 BMW 차량의 화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건에서 EGR 쿨러 누수로 퇴적된 집진물이 EGR 밸브

를 통해 들어온 고온의 배기가스와 만나 불티가 발생하고 엔진룸 흡기시스템(흡기매니폴드)에 붙어 불꽃으로 확산돼 화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18일 BMW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던 화재 발생 조건과는 다르다는 게 민관합동조사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BMW 측이 현재 리콜을 진행하고 있는 EGR 모듈에 EGR 밸브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발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자발적 리콜 중인 BMW 디젤 차량의 근본적인 화재 원인은 EGR 쿨러의 누수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며 이는 이번엔 민관합동조사단이 밝힌 중간 조사 결과와도 동일하다. 현재 리콜 작업은 EGR 밸브가 포함된 EGR 모듈 전체에 대한 교체이며 EGR 밸브, 바이패스 등은 화재의 주원인이 아닌 조건 중 하나이다.

업계 관계자는 “EGR 밸브는 EGR 모듈 안에 포함된 것”이라며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쿨러의 냉각수 누출이며, 바이패스 밸브 열림은 조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양성문 기자 ysw@